



독일편

# 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올리라고?

수급 연령 높이고, 연금액 늘리고, 100% 세금공제 추진하는 독일

Editor 김수민 독일 베를린대학 박사과정

■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와 노동시장, 연금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베이비부머 세대 대다수가 은퇴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독일 노동시장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는 독일 인구의 89%가 노동인구에 편입돼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1290만 명의 노동인구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2021년 노동시장 인력의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는 정부의 연금지급 능력을 악화시킨다. 독일인은 60세부터 64세 사이에 연금생활을 시작한다. 조만간 50대에 속한 베이비부머는 은퇴해 연금을 수령할 것이다. 노동인구는 줄고 연금생활자가 늘어나면서, 미래에는 젊은 세대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노인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부족한 노동인구는 여성 인력으로 대체

최근 독일의 정보연구소(Info-Institut)는 현재 독일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둘 중 하나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독일 KOFA(Kompetenzzentrum für Fachkräftesicherung, 독일 전문인력확보 역량센터)에서는 현재 독일 노동자의 22.8%가 55세 이상이라는 연구 조사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히 건축과 건설, 측량 분야에서는 55세 이상 노동자 수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은 앞으로 십여 년 뒤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인력인기에 이를 충원할 대체 노동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KOFA는 이와 관련한 대처 방안으로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관계자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노동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연금개시 연령 늦출 수 있을까

독일은 빠른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금속및전자산업고용주협회 회장인 스테판 볼프는 폰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연금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70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볼프 회장은 “현재 연금 적립금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층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스테판 볼프 협회장은 연금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독일금속및전자산업고용주협회)



현재 독일 노동자의 22.8%가 55세 이상이라는 연구 조사가 발표됐다. 특히 건축과 건설, 측량 분야에서는 55세 이상 노동자 수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십여 년 뒤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인력인기에 대체 노동력이 시급하다.

이 같은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립 정부가 연금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게

다가 독일 연금 수급자 사이에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금개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독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 연금을 앞당겨 수령한 사람 수가 2013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본래 정해진 것보다 평균 27.7개월 빨리 연금을 개시했다. 특히 독일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연금수급자들의 조기수령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 물가상승 맞춰 연금액 인상될까

독일 정부는 2022년 여름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의 연금액을 인상했다. 법정연금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다. 독일 정부는 2022년 7월 서독 지역 연금액은 5.35%, 동독 지역은 6.12% 인상했다. 당연히 은퇴자들은 연금액 인상을 환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독일금속및전자산업고용주협회 회장인 스테판 볼프는 폰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연금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70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등 물가가 급등하면서 연금액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됐다.

그렇다면 독일 정부는 2023년에도 연금액을 인상할까. 독일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연금보고서에서 2023년 여름에도 연금액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덩달아 임금도 일정 부분 상승한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임금 상승 영향으로 연금액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독일 정부는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오른다고 발표했다.

소득상한선은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실업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친다. 소득상한선이 높아지면 연금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연금액이 얼마나 인상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7% 이상 오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연금 수령액 변동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정이 지속됐고, 이런 상황이 연금 수령액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법정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 연금보험료,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연금액 인상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희소식이라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법정연금보험 가입자

독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에 연금보험료를 100% 세금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022년 94%에서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인상해 2025년에 보험료를 전액 세금공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에 연금보험료를 100% 세금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2022년 94%에서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인상해 2025년에 보험료를 전액 세금공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아직까지 독일 연방 재무부에서 비판적인 논쟁이 오가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독일 연방 재무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32억 유로(4조4000억원 상당)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에도 17억 유로가 넘는 감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

# 노후가 풍족해지는 나만의 비법 이제 연금이 쉬워집니다



매주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절세

개인연금

ETF

리츠

자산배분

연금화

퇴직연금

TDF

자산권

보험

